

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 방향

- 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2024.05. 28

윤 석 명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공론화위원회 활동 평가

PAR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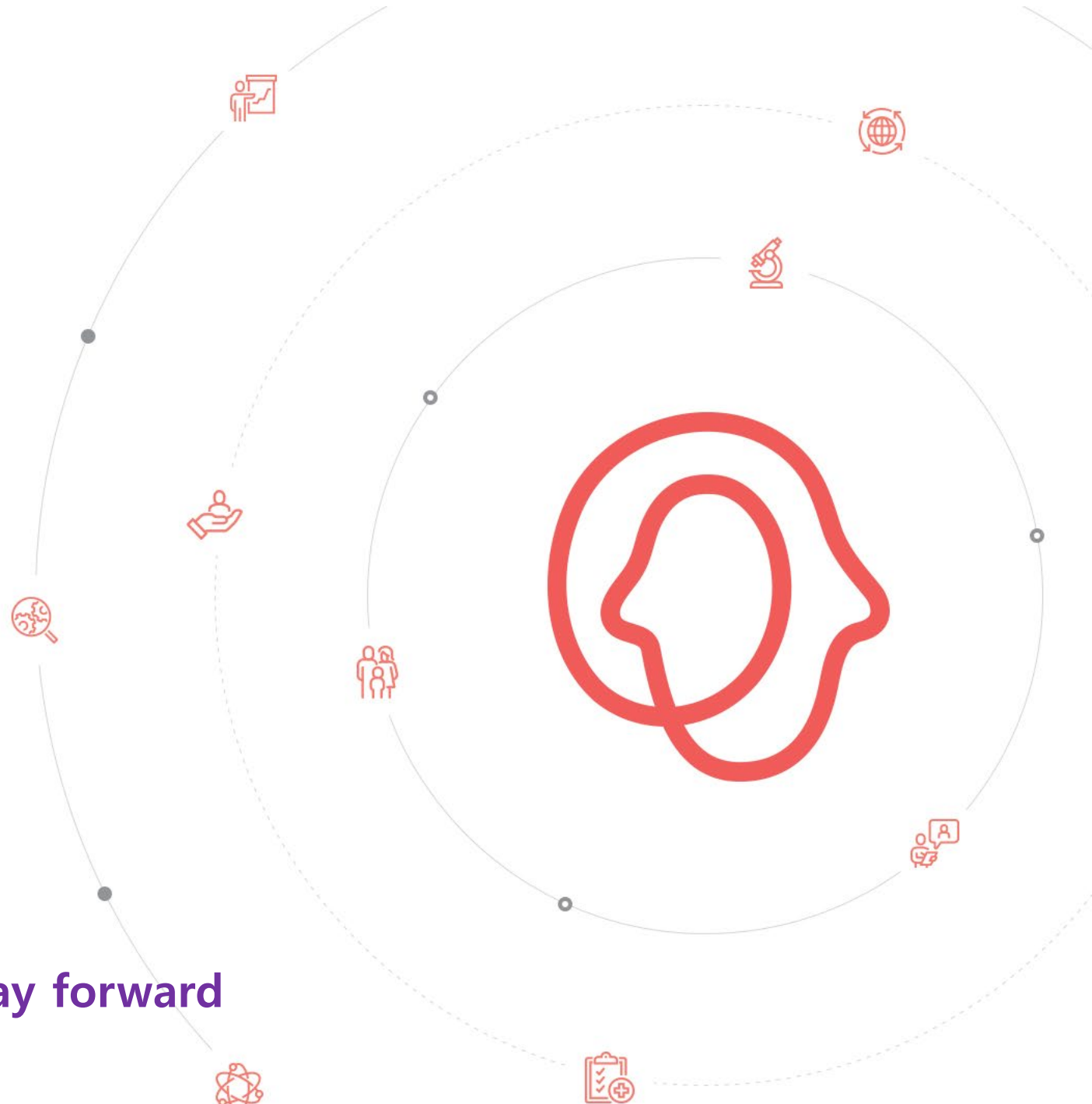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들

PART.3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PART.4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 제시 - Way forward



1. 공론화위원회 활동 평가



1.1 공론화위원회 논의안에 대한 재정 평가 기초자료 (1)

대안 별 수지균형 보험료율,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비교

구분		현재(9-40)	1안(13-50)	2안(12-40)
기금고갈 시기		2055년	2061년	2062년
2093년 누적적자	총액	2경 1,656조원	2경 2,660조원	1경 7,058조원
	증감액	-	+1,004조원	-4,598조원
소득대체율에 따른 수지균형보험료율		19.8%	24.8%	19.8%
기금소진 후 최대 필요보험료율(%)		35.0%(2078년)	43.2%(2078년)	35.1%(2078년)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2005년생	14.1%	14.8%	13.1%
	2015년생	20.2%	22.2%	18.8%
	2025년생	26.6%	29.6%	24.5%
	2035년생	32.1%	36.1%	29.3%
GDP 대비 총지출(%)		최대 9.5%(2083년) 8.8%(2093년)	최대 11.8%(2083년) 11.0%(2093년)	최대 9.6%(2083년) 8.9%(2093년)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뉴스1에서 재인용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구분	수지 적자	기금 소진	필요보험료율		수지균형 보험료율 (보험료율과 차액)	현행 대비 누적수지 적자규모 (점상가 기준)
			최고 (78년)	'93년		
9·40 (현행)	2041년	2055년	35.0%	29.7%	19.8% (-10.8%p)	-
13·43	2048년	2064년 (+9년)	37.5%	31.9%	21.3% (-8.3%)	-4,318조원
13·44	2047년	2064년 (+9년)	38.8%	32.7%	21.8% (-8.8%p)	-3,738조원
13·45	2047년	2063년 (+8년)	39.1%	33.4%	22.3% (-9.3%p)	-2,766조원

1.3 공론화위원회 논의안에 대한 재정 평가 기초자료 (3)

< 현행 및 대안별 재정전망 >

	구 분		기금소진 시점	필요보험료율 ¹⁾ (’78년 기준)	현행대비 누적수지 적자 규모 ²⁾ (경상가, ~’93)	GDP 대비 총지출 (’83, 최고)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현행	9%	40%	2055년	35%	-	9.5%
1안	13%	50%	2061년 (+6년)	43.2% (+8.2%p)	+1,004조원	11.8% (+2.3%p)
64세 연장	13%	50%	2059년 (+4년)	45% (+10%p)	+5,676조원	13.5% (+4%p)
2안	12%	40%	2062년 (+7년)	35.1% (+0.1%p)	-4,598조원	9.6% (+0.1%p)
64세 연장	12%	40%	2060년 (+5년)	36.6% (+1.6%p)	-833조원	10.9% (+1.4%p)

1) 필요보험료율: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

2) 누적수지는 기금소진 시점부터 추계기간 말(’93년)까지 연도별 수지를 누적하여 계산

* 의무가입연령은 현 59세에서 2025년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가정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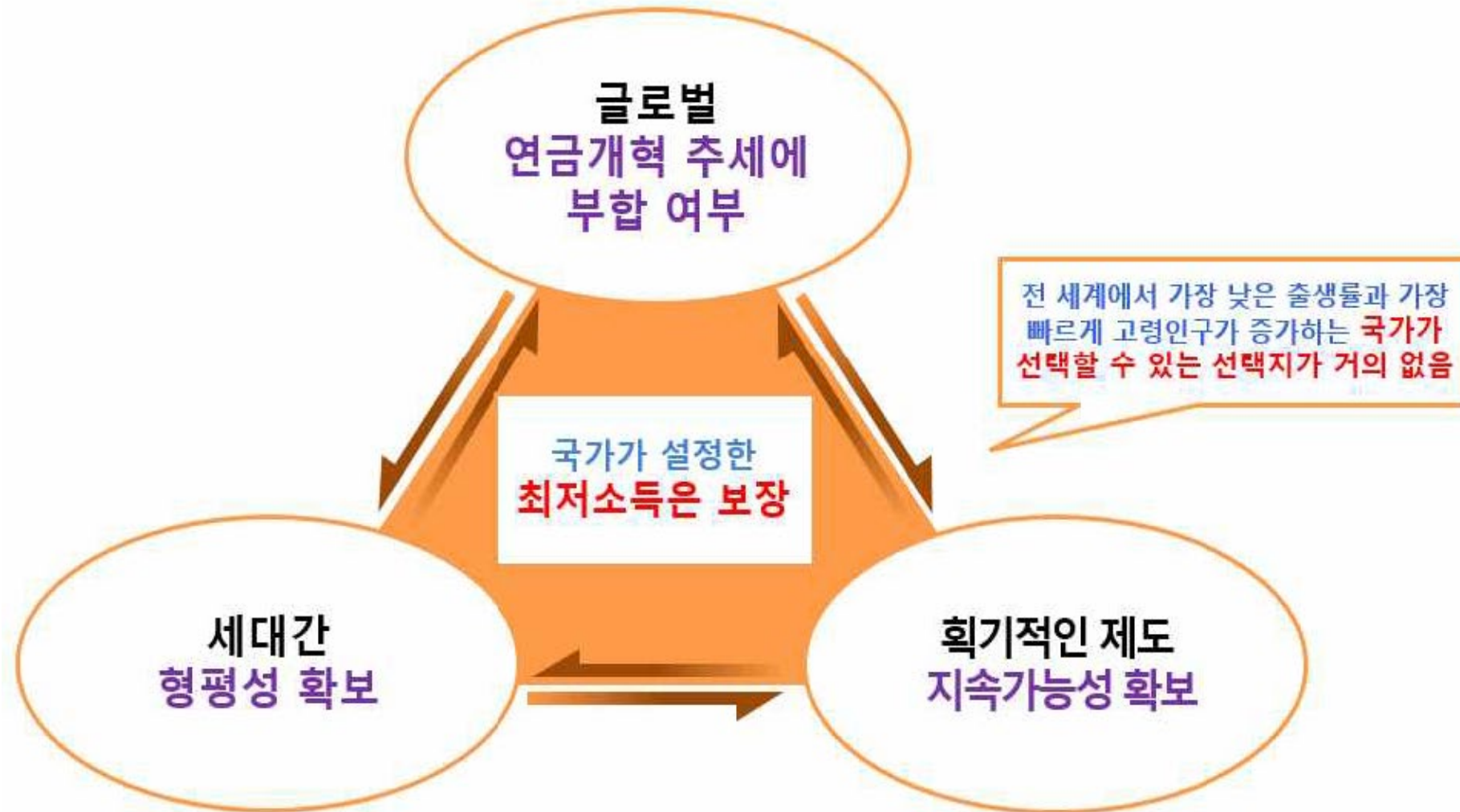
- ▶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 내용
 -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 내에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할 지라도
 - 재정안정 달성 불가능 (훨씬 미흡)
- ▶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조합안을 채택할 경우
 - 보험료율을 수지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짐.
 - 제도 개편 이후에 매년 8.8% 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를 적게 걷음에 따라, 매년 그만큼 부채 발생 .
- ▶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3,738조원(경상가)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 시민대표단이 합의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할 경우
 - 누적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예정인지라, 의무납입연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조치임.

2.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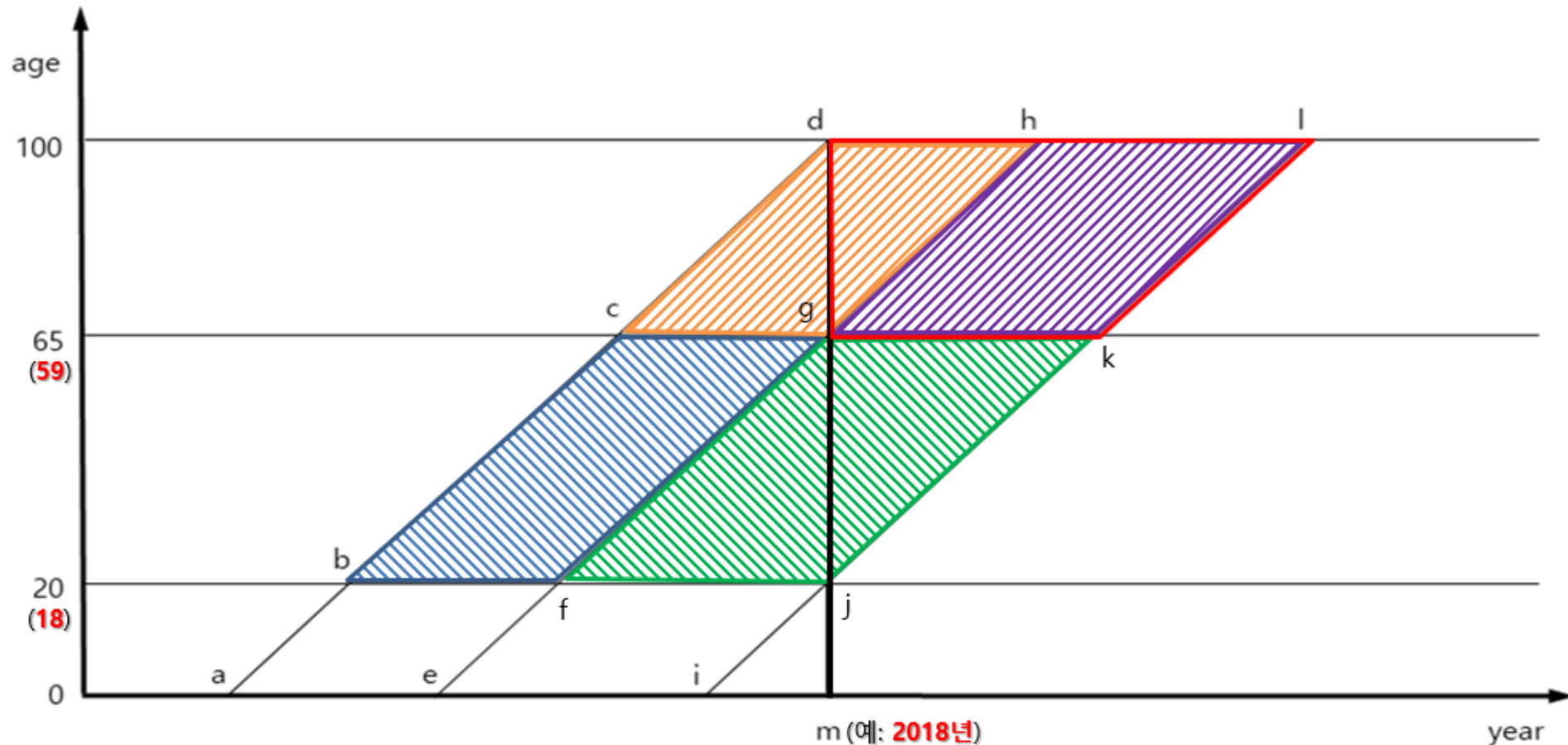
2.2 주요 연금 정책 목표를 모두 고려하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부여



제도에 내재된 재정 불안정 요인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는, 초장기간에 걸친 재정추계 기간 설정 (from 70 yrs to 100 yrs)

렉시스 도형(Lexis Diagram)

- 포폴리즘 정책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수단
- 재정추계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제도에 내재된 재정 불안정 요인이 노출됨 (한국 70년 vs 일본 100년)



2.4 기금소진 시점 위주의 재정안정 평가 관행이 장기 재정상황을 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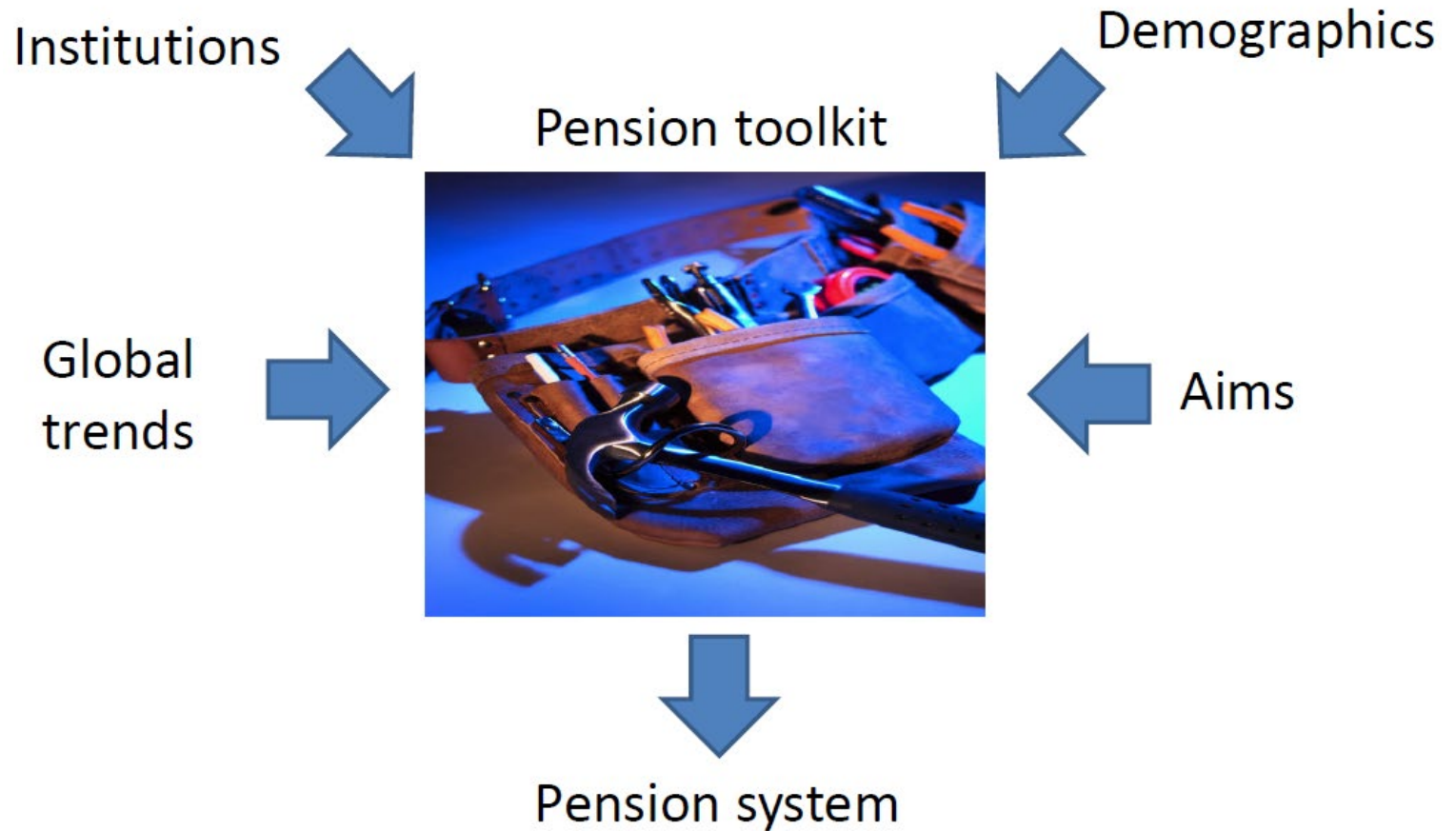
-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안’과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안’** 출처: 5차 재정계산위원회 자료
 윤석명 재정안정방안
 - 기금소진 시점 차이가 **5년에 불과함**
 -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나 더 지급**하되, **보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해도 **5년만 차이남**.
 - 기금소진 시점: **2065년**(‘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과 **2070년**(‘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

	최대적립 기금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부과방식비용률			
				2080년	2093년	소진시점	
현재도 유지안 (보험료 9%, 대체율 40%)	2040년 (1,755조원)	2041년	2055년 (△ 47조원)	34.9%	29.7%	26.1% (‘55)	
소득보장안 I (보험료율 15%, 대체율50%)	2049년 (3,048조원)	2050년	2065년 (△ 13조원)	43.2%	37.1%	38.5% (‘65)	
강한 재정 안정화안 (보험료율 15%, 대체율 30%)	① 소득 비례형	2048년 (2,684조원)	2049년	2069년 (△268조원)	27.6%	23.1%	27.3% (‘69)
	② A값유지	2049년 (2,709조원)	2050년	2070년 (△231조원)	26.7%	22.4%	26.5% (‘70)

2.5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 구축

- 연금개혁의 국제 추이 반영
 - 인구구조 변화 고려
- 기존 연금제도의 경로 의존성
- 적절한 연금 정책목표 설정
-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출처: 한국과 스웨덴 복지부 장관이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스웨덴 전문가 발표 자료 (20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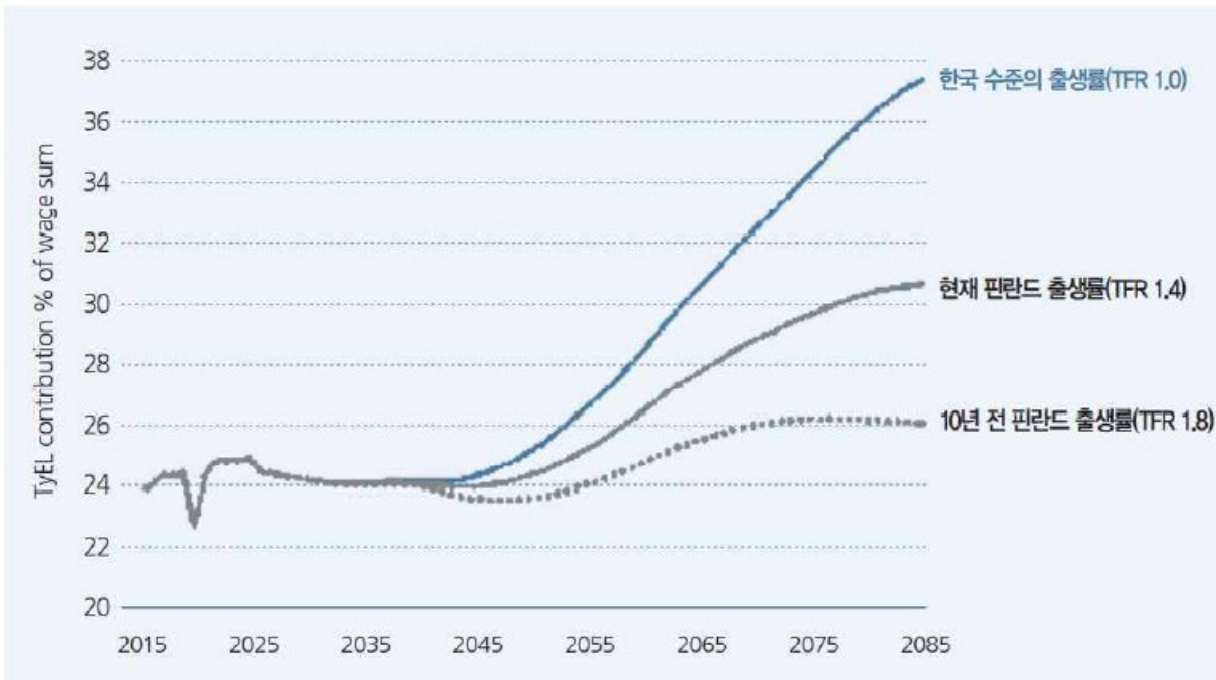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3.1 외국의 연금 전문가들과 최신 연금개혁 동향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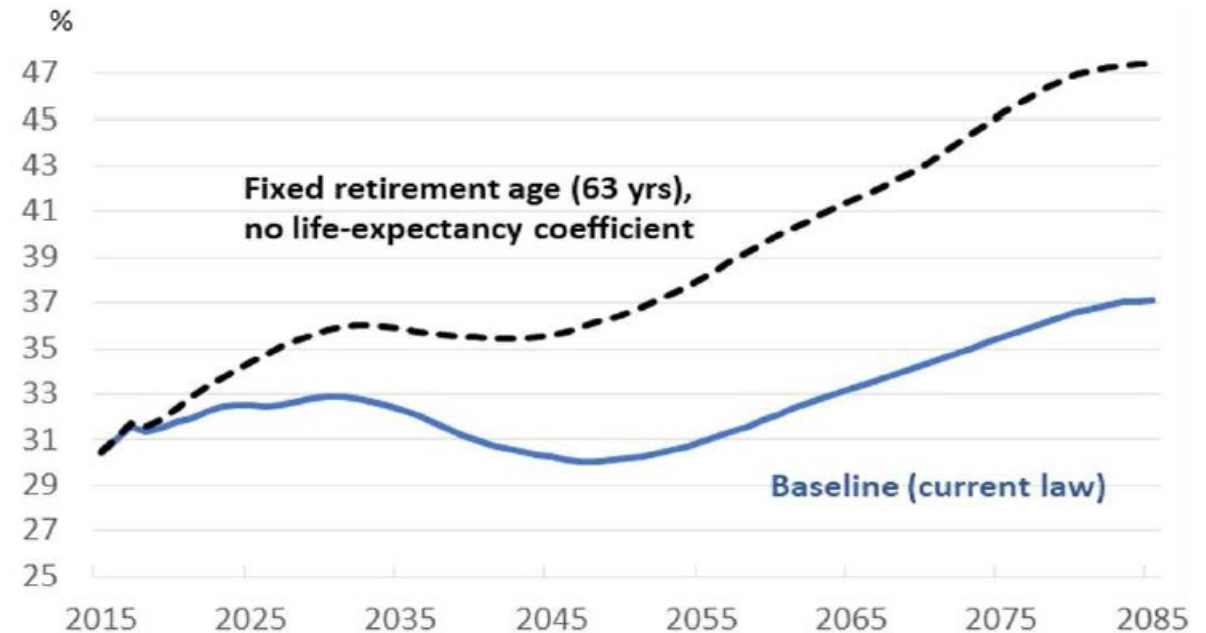
- Ismo Risku, Finnish Centre for Pensions (FCP)의 기획조정실장
 -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상이한 출산율 가정 하에서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제도 (Peer Review) 도입

(핀란드) 상이한 출생율 가정 하에서의 필요 보험료율 변화 추이



출처: Mikko Kautto, 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

자동안정장치 부재, 수급연령 63세로 고정할 경우 예상 보험료 수준



출처: 윤석명 외 (2022)

한중일 연금 전문가 회의

- 일본 연금분야 공무원 발언
- 일본(18.3%)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국(9%)이
- 어떻게 일본(소득대체율 약 33%)보다 훨씬 많은 연금 소득대체율(42%)을 보장할 수 있는가?

日本の年金制度の特徴 (3) 最近の動向

• 最近の改正

• 2004年改正

(1) 保険料固定方式の導入

- 従来は給付水準を決定し、それに見合う保険料(率)を設定。
- 2004年以降、国民年金は毎年280円、厚生年金は毎年0.354%引き上げ、国民年金は2017年4月に16,900円(2004年度価格)、厚生年金は2017年9月に18.3%で固定。

(2) マクロ経済スライドの導入

- 保険料を固定したことで、収入を増加させる方法の1つが失われた。
- その中で、給付と負担のバランス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
- 物価や賃金の上昇に連動した給付水準の上昇について、経済社会の状況をもとに一部抑制する方法。

(3) 有限均衡方式の導入

- 約5年分の給付をまかなうだけの額があった年金積立金を、約100年間かけて、約1年分の給付をまかなう水準まで取り崩す。
- ただし、5年に1回行われる財政検証のたびにその後約100年で計算するため、実際に今から100年後に約1年分の給付しか残ら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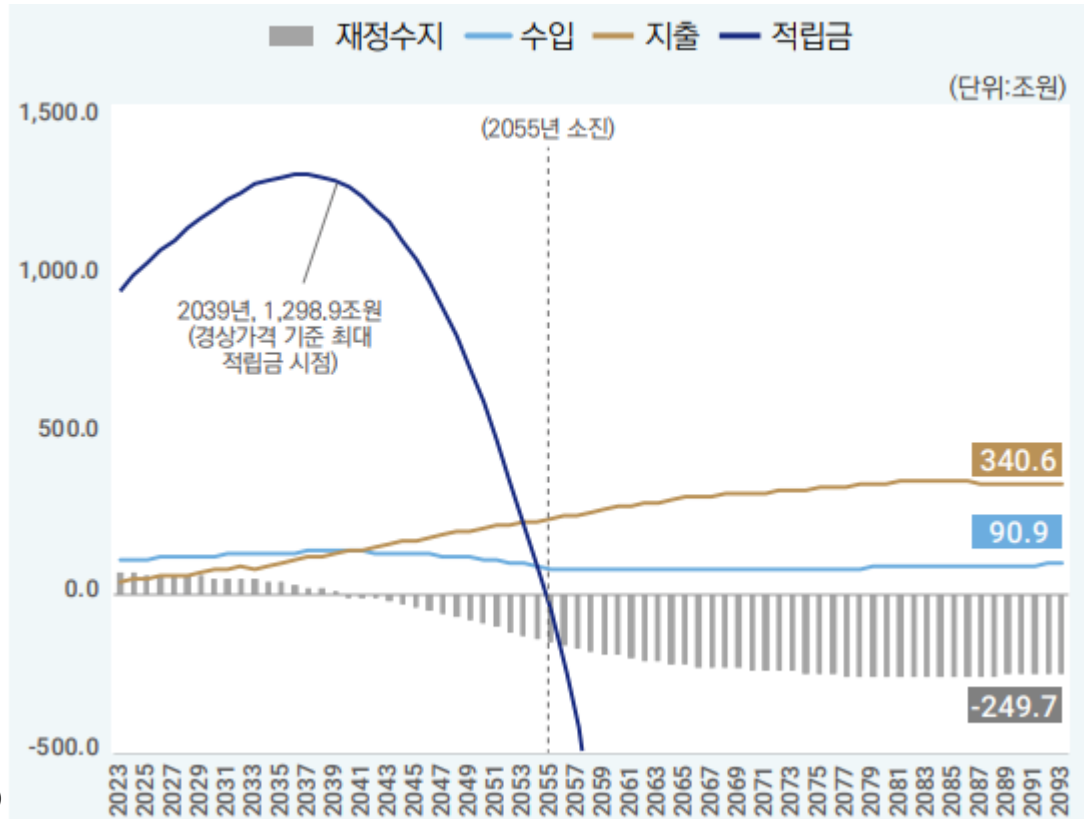
※ 財政検証では、パラメータによっては積立金が枯渇するケースも想定。

3.3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 보험료 인상 최소화, 자동안정장치 통해 재정안정 달성

▶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

-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
-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 도입**과 이로 인해 줄어들 실질 연금소득은 **의무납입연령 연장** 통해 보충

Long-term Projection of NPS (Baseline): 2023~2093



Changes in Case of **2%pt Increase in Replacement Rate** (from 40 to 42%) of the NPS



4.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

- Way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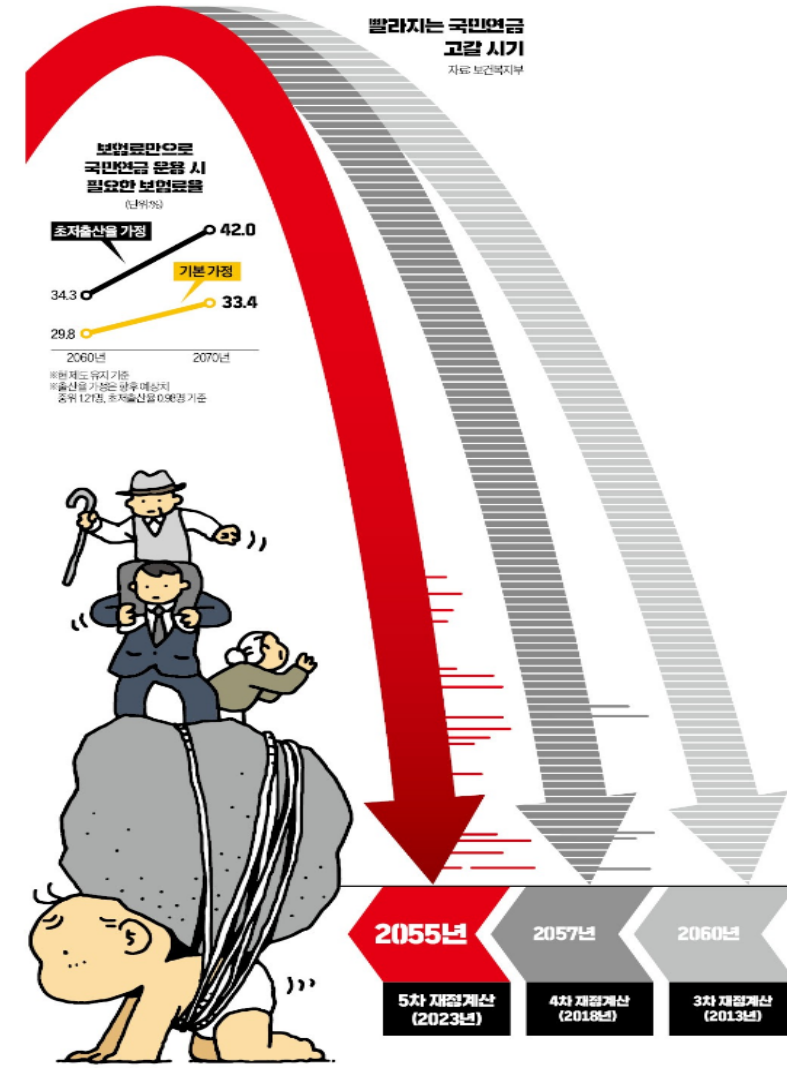


4.1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의 연금 정치

칼날 위의 균형과 같은 상황



OECD



4.2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한국 노인빈곤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음.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연금개혁은 **별개 문제**임.
노인빈곤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해결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Greed and class discrimination **threat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althy family & the destitute clan** in darkly modern fairyta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를 유지 하고, 보험료만 인상함

- ▶ 연금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것임
 -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걸어야 하기 때문임.
- ▶ 국회 특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 보험료 13% 조합'은 개악안임.
 -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걸어야만 소득대체율 44%에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지 않게 됨.
 - 미래세대 부담 덜기 위한 개혁 논의인데, 부담을 더 많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음..
- ▶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
 -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함.
 -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면,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의
 -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됨에 따라,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간 고통 분담이 가능하게 됨.
 -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eople
with People
in Mine

감사합니다 !